

유럽통합과 전후 독일 외교정책 논쟁 (1945-89)

김성형

통일시대연구소

전후 유럽은 독일에게 ‘정치적 협력의 장’, ‘경제적 경쟁의 장’을 의미하였다. ‘경제거인’이지만 ‘정치난쟁이’라는 정체성 괴리는 과거의 역사적 짐과 독일분단의 결과인 압박감으로 설명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랫동안 독일 외교정책의 전략적 목표였던 통일이 달성되었다. 이는 구동독주들의 독일연방과 동시에 통일독일이 유럽연합으로 통합된 이중통합이었다. 그러나 유럽통합은 서구중심으로 통합을 심화하면서 동심원권으로 동구에 확대한다는 기존 유럽통합의 두 가지 방향과, 빈국과 부국간의 진행이라는 두 가지 속도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여기에는 독일외교정책에 대해 과거와 관련된 다양한 견해들이 도출되었다. 한편에서는 향후 서구동맹국들의 연대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과,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력에 걸맞은 정치·군사력에 걸맞은 외교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논쟁이 독일 내외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렇다고 독일이 유럽공동체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진행 속도를 서둘러도 제4제국으로 회기한다는 의심을 받고, 주변국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도 유럽통합 발전에 관심이 없지나 않을까 하는 의혹을 사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독일의 외교정책을 내외적인 문제보다도 독일인 자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결론을 내린다.

1. 서론

독일은 전후 소련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서방 봉쇄정책 속에서 주권국가로 성립된 후 경제기적을 이룩해 냈으나, 힘이 분산된 ‘경제거인·정치난쟁이’로 특징되었다.

그러나 구소련 및 동유럽체제붕괴, 독일통일 등 기존의 국제정치구조가 흔들리고 그 결과 야기된 질적인 변화와 관련, 독일은 이제 정치난쟁이가 아닌 정치·외교·경제 강대국으로 그 행동반경이 확대되었다. 국토분단 해소와 이념적 장벽이 무너져 동·서 유럽의 근본적인 차별성이 사라진 현 상황에서, 독일은 세계최고 수준의 경제력과 地政·地經學的 위치 그리고 다시 획득한 국민적 단합으로 그 지위가 더욱 강화되어 프랑스와 함께 유럽통합을 추진하는 핵심국가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환경의 극적인 변화로 독일내부와 서구진영의 제학자들을 중심으로 “史家論爭”이 벌어졌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수립된 과거 독일의 외교정책에 대해 또 다시 광범위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예컨대 새로운 독일인가? 아니면 확장된 독일인가? 과연 독일은 보다 독단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할 것인가? 통일후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가? 독일의 국제적 활동이 보다 정

상화되고 있는가? 등 서로 복잡하게 연관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된 것은 과거 독일의 역사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1871년 독일의 첫 통일 당시 전 유럽은 새로운 힘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 이유는 독일의 제2제국 혹은 비스마르크의 독일통일이 소독일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9년 두 번째 통일 이후에는 당시 통일과 비교해 볼 때 다소 변화가 적었다. 외적으로 비스마르크 때의 철혈정책이 아닌 전화와 수표로 통일을 성취하였고, 내적으로 동독이 서독으로 곧장 가입하면서, 확대된 독일은 EU, NATO 그리고 서구의 주요 초국가적인 기구에 가입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급변한 현실이 유럽통합의 성공여부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 과거 역사와 관련된 독일 문제에 관한 논쟁이 유발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국제관계에서 독일의 위치, 외교정책,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과거사와 관련된 독일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교정책의 역할이해와 그 양식에 대한 질문이 독일외교정책의 성격과 전망을 고려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전후 유럽통합 운동의 배경, 독일외교정책이 서구 지향적 유럽통합방향으로 선회한 배경과 그 속에서 자리잡게된 독일외교정책의 특징을 살펴 본 후, 새로운 국제정세의 도래로 형성된 독일에 대한 다양한 논자들의 시각을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이는 기존 주변 강대국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독일외교정책에 대한 평가와 독일내적 시각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후 독일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감, 그리고 낙관론과 비관적인 논자들의 입장을 살펴보면서 통일 이전에는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실제로는 상존했던 다양한 문제점들을 살펴봄으로써 독일문제의 근원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유럽통합과 독일의 분단

1. 유럽통합의 배경

2차 대전으로 완전한 붕괴를 겪은 서유럽은 국가간 경쟁의 무의미함을 깨달은 후, 신선한 재출발의 국면을 설정하고 유럽질서재편성을 위한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출발한 전후 유럽통합운동의 추진 배경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유럽의 지위약화에 대한 인식이다. 전후 내부의 약화되고 분열된 유럽은 세계 중심지로서의 옛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를 정치·경제·군사적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미·소가 차지하게 되었다 (Laqueur, 12). 둘째, 실제로 통합운동의 계기는 1946년 9월 19일 처칠(Winston Churchill)의 쥐리히 연설이었다. 다시는 공포로 가득한 참혹한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 모든 정치행동의 지침이 되었다.¹⁾ 셋째, 사회적·국제적 관계가 질서정연하게 자리잡을 수 있는 풍요로운 자유 세계에 대한 간절한 욕구가 분출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여러 기구들이 특별한 상호관련은 없지만 몇 가지 공통되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설립되었다. 첫째, 전후 미국과 서구 관계에서 경제·군사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미국 주도의 OECD, NATO, WEU 창설, 둘째, 스웨덴,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정치적 제약을 받거나 주권의 일부 포기를 꺼리는 중립국들을 수용하기 위한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창설, 셋째, ECSC, EURATOM, 그리고 EEC 창설이 그것이다.

EC의 기원은 1950년 5월 9일 프랑스 외무장관 슈망(Robert Schumann)이 프랑스 외무부(Quai d'Orsay)의 살롱 드 로를로주(Salon de l'Horloge)에서 가진 내외기자회견에서 ECSC 결성을 다음과 같이 처음 제의한 날로 거슬러 올라간다.²⁾

“이러한 계획의 채택은 유럽연방을 향한 첫 걸음이 될 것이며, 오랫동안 전쟁물자 생산지역의 운명을 변화시킬 것이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참가의 길이 열린 조직 내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석탄과 철강 생산의 전부를 공동관리청의 관리하에 두자 (Alan Hick, 92).”

슈망플랜의 동기 및 결실 배경은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당시 유럽인들은 독·프 분쟁 재발 방지를 가장 긴요한 과제로 여겼다. 둘째, 전후 유럽 경제재건을 위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치안정 도모를 희망하는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셋째, 유럽인들은 전후 동·서 냉전 안에서 또 다시 전쟁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다. 넷째, 유럽인들은 냉전과 더불어 미·소에 의한 양극화 속에서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약화됨을 의식해 결속의 필요성을 느꼈다 (Lippens and Loth, vol. 4, 170-75). 이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사람은 모네(Jean Monnet)로 그의 생각은 이랬다.

“유럽의 번영 없이는 프랑스의 경제도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없으며, 미·소로 양극화된 국제정세에서 유럽이라는 제3의 힘이 중재역할을 함으로써 국제긴장에 기여할 수 있다 (Lippens and Loth, vol. 3, 13-16).”

그는 독일의 새로운 전진도발 가능성 제거와 독·프간의 재통합 없이는 유럽통합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았다. 아테나위도 독·프 관계 개선 제의 수락 뒤에,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보다 빨리 국제사회 참여로 주변국가들과의 대등한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

1) 양차대전을 중심으로 한 유럽통합운동 관련 원전은 다음 참조. Walter Lippens and Wilfried Loth (ed.), *Documents on the History of European: Transnational Organizations of Political Parties and Pressure Group in the Struggle for European Union, 1945-50*, vol. I · II · III · IV (Berlin · New York, 1991).

2) EC 형성이전부터 전쟁방지 및 평화보존을 위한 통합 시도가 있었다. 샤를마뉴, 합스부르크 왕가, 나폴레옹, 그리고 히틀러에 의한 군사적인 시도, 칸트, 생 시몽, 로버트 오옌, 쿠덴호프-칼레르기 등 지식인들의 평화적인 시도, 그리고 브리앙 등 정치인들의 시도가 있었다.

것으로 보았다.

한편, 미국은 49년 11월부터 서독의 재무장을 주장하였다. 독일의 재무장에 반대했던 프랑스는 한국전과 동·서 긴장상황을 파악, 유럽국가들의 공동방위 노력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프랑스의 내각 수반 플레벤(René Pleven)이 국회에서 서독을 포함해 유럽국가들과 유럽방위공동체(EDC)의 창설을 제의하였다 (Lipgens and Loth, vol. 3, 753).

그러나 프랑스국회가 군통수권의 일부 포기는 주권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를 거부해 실패하였다. 1955년 6월 1일 EDC 실패후, 유럽통합의 활성화를 재 모색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성 높은 경제분야의 통합을 단계적으로 실현하자는 의견이 모아져, 이탈리아 시칠리섬 메시나에서 ECSC 6개국 외무장관들을 중심으로 유럽통합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었다 (Schußresolution der Konferenz von Messina vom Juni 3 1955, 5191).

이 책임을 맡은 벨기에 수상 스파크(Paul Henri Spaak)는 EDC 구상이 너무 야심적이어서 붕괴되었기 때문에, 통합 목표를 더 온건하고 현실적으로 접근, 즉 정치통합에 앞서 경제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그 결과 57년 3월 25일 로마에서 EURATOM 조약과 EEC 설립에 관한 조약이 스파크 보고서를 기초로 체결되어 5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Heater, 165-67). EEC 조약은 로마조약으로 불리면서 67년 ECSC와 EURATOM이 EC에 흡수 통합되어 EU로 발전하는 초석이 되었다.

2. 독일의 분단과 유럽통합

유럽통합은 독일의 주권회복 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전후 서독의 유럽정책의 흐름이 서구지향적 유럽통합쪽으로 선회하도록 많은 영향을 주었다. 독일에게는 서유럽으로의 참여만이 향후 독일의 주권회복 및 서구국가들과 같이 동등한 주권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된 것이다.

독일분단의 책임은 민족사회주의(Nationalsozialistisches Deutschland) 침략전쟁, 승전국들의 정책, 그리고 전후 전체 점령지역내 독일엘리트들의 태도 등 세 가지 과정으로 설명된다 (Volker Rittberger, 7-9).

첫째, 민족사회주의 독일이 무조건 항복한 후, 미·소는 안보이익추구 및 새로운 세계질서모델을 위해 경쟁적으로 유럽 특히 점령 독일지역에서 마주치게 되었다. 즉, 미국은 최소한 자유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협력국들과 세계자유무역체제를, 반면 소련은 반파시스트적 ‘인민 민주주의’에 기반한 공동체제가 점령지에 자리잡도록 하였다. 그러나 양측은 평화적 상호협력부족 및 상호 의도와 협력 가능성의 평가부족으로 동·서 냉전체

제로 분열되었다. 이러한 독일 전체의 공동 신탁통치가 실패한 상황에서, 독일이 점령지역내 분단된 주들을 재통합시키기 위해 주변국들로부터 동의를 얻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기존의 사실 즉, “저당물권(Faustpfänder)”으로 취급받거나 강제적 분단 정책이 펼쳐질 뿐이었다.

둘째, 미국은 자신들의 ‘문호개방 정책(Open Door)’과 일치하는 공동 독일점령 정책을 관철시키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반공산주의의 보루인 서방지역의 통합에 초점을 맞추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영·프 연합국 측은 소련의 공산주의 팽창 가능성을 견제하고 서유럽을 방어하기 위해, 서독이라도 서유럽의 자유진영에 편입시키려고 하였다. 그래서 1947년에는 독일의 서방점령지구를 ‘유럽경제재건 프로그램(Europäisches Wiederaufbauprogramm)’인 마샬플랜 대상에 포함시켰던 것이다 (Loth, 1989, 89). 이 역시 독일이 서구지향 정책을 택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1947년 1월 1일 일찍이 “서독의 미·영 점령지구(Bizone)” 결정에 찬성한 영국의 처칠은 독·프의 오랜 적대감정도 유럽통합 체제에서만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EC가 재창출되기 위한 첫 단계는 독·프 간의 동반관계입니다..... 정신적으로 위대한 독일과 프랑스 없이 유럽은 다시는 소생할 수가 없습니다 (Lipgens and Loth, 265).”

48년 5월 8일 유럽운동 헤이그회의(Hague Congress of the European Movement)의 결의문에서도 독일의 서유럽 편입만이 독일문제의 유일한 정치·경제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유럽경제가 회복하기 위한 조건중의 하나로 독일경제의 재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Lipgens and Loth, vol 4, 209).”

프랑스는 독일의 광범위한 연방화, 라인강 좌편 지역의 분할, 루르지역의 국제화를 주장하였으나,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자국이 점령한 지역 정책을 1949년 4월 1일 “미·영·프 점령지구(Trizone)”에 보조를 맞추었다. 프랑스의 독일정책 선회는 분단된 서독을 서유럽으로 통합시킴으로써 독일에 대한 프랑스의 통제를 보장받으려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방 연합국측과 서독 주지사들 사이에 서독 정부수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것이 독일의 분단을 영구화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48년 9월 본에서 기본법³⁾ 제정을 위한 자문의회가 열렸다. 그리고 서독은 과도기 동안 정치안

3) 기본법이란 헌법이나 마찬가지로 독일이 재통일될 때까지만 사용될 ‘잠정적’ 조치로 생각되

정과 민주주의 확립 등 새로운 질서정립을 위해, 49년 5월 국가기본법 제정과 독일연방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동시에 서유럽 지향적인 국가정책방향의 기초 위에 유럽통합은 서독외교정책의 기본노선이 되었다.

셋째, 모든 점령지역내에 있는 독일의 엘리트들은 전체 독일문제 해결에 무관심했다. 때로 다른편들과 묶여 협상하더라도 이를 풀어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서방지역의 CDU와 SPD도 같았다. 당시 아데나워가 지향하는 최고의 목표는 다만 독일의 경제·정치적 빠른 재건 및 서독의 주권회복이었다. 당시 서독의 주권은 서방과의 결속 없이 그리고 독일분단 유지 없이는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아데나워는 내적 주권과 서구 국가공동체내 평등권 획득을 위해 재통일을 뒤로 미루고 외교정책 협상의 자유를 제한하였다. 아데나워는 국내정치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재통합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으로 ‘서유럽 통합이야말로 독일 재통일의 전제조건이다’는 미사여구로 선전해야만 했다.

이와 비슷하게 서방지역 SPD의 슈마허도 분명한 반공산주의 정책을 수행하였다. 사실 서방지역 SPD는 재통합에 대해 훨씬 덜 미사여구적이었다. 오히려 이들은 동구와의 협조, 예를 들어 독일재통일 문제에 중립적인 입장을 거부하였다. 한편 아데나워의 강대국 정치(Politik der Stärke)는 사회적으로 끌어당기는 연방공화국 때문에 소련점령지역인 동독은 영원히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석역할(Magnetwirkung)”을 만들어 내었다. 이와 관련한 SPD와 CDU간의 논쟁에서 슈마허는 아데나워를 “연합국의 수상(Kanzler der Alliierten)”이라고 명하였다. 이 논쟁은 서유럽 통합에 따른 주권포기의 정도와 재무장의 시기와 상태에 대한 것보다 소련과 동독에 반대하는 정책에 대해 덜 논쟁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마침내 54년 10월 25일 독일패전 후 10년만에 파리에서 서독과 미·영·프 세 점령국간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파리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서독의 주권이 선포되었다 (Loth, 1986, 318-23). 비로소 서독이 WEU와 NATO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 때 아데나워는 서방과의 관계에 제일 목표를 두었고, 서독의 유일한 좌표는 자유롭게 통합된 유럽과 통일된 독일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쟁 패전 후, 독일의 유럽정책은 독일문제라는 과거 독일의 역사적 특수성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정치적 무관심 속에서 과거 권위적이고 군국적인 가치에 냉소적이 되었으나, 이를 대신할 대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신이

있고, 이는 1871년 통일 이후부터 1918년까지 권위주의 정부와 1933년 이후 나치의 전체주의 통치정산을 전제로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Michael Balfour, *West Germany: A Contemporary History* (London & Canberra: Croom Helm, 1982), 158-169 참조.

없었다. 따라서 양차대전의 전범이라는 사실과 냉전에 따른 동·서독 분할로 전후 분단된 서독의 외교정책과 경제정책은 **서구지향적임**과 동시에 **유럽통합지지** 쪽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서유럽통합운동 참여만이 향후 독일의 완전한 주권회복과 서구국가들과 같은 동등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Loth, 1989, 89).

이상과 같이 2차대전후 서독이 이러한 노선을 채택한 주된 이유는 세 가지 역사적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Bulmer and Paterson, 5-6), 이를 통해 독일과 유럽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독일의 역할 및 지위의 변화발전 과정을 알 수 있다.

첫째, 당시 서독의 주권은 서방과 독일의 분단상황을 인정하지 않고는 유지하기가 힘들었다. 이러한 결속을 통해서만 서독은 국제적으로 국가신용과 위신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유럽의 평화를 위협한 민족사회주의 침략 및 말살 정책과 같은 호전적 외교정책의 전통인 **‘과거의 그늘(Schatten der Vergangenheit)’**을 던져 버린 것이다. 그 결과 동구지역의 분할과 상실에 따른 독일 영토의 제한뿐만 아니라, ABC 무기 포기, NATO 사령부하의 연방군 직속으로 군대가 제한되었다. 동시에 국제관계에서의 힘있는 국가의 고자세를 포기하였다. 이러한 역사인식은 이스라엘과는 특별한 관계를 그리고 적대적이었던 폴란드와는 긴장완화를 이끈 실마리였다. 브란트(Willy Brandt)가 바르샤바 유대인 기념비(Getto-Denkmal)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것은 슐레지엔 지역에서 서독 수상 콜(Helmut Kohl)과 폴란드 국무총리 마조비에츠키(Tadeusz Mazowiecki) 사이의 화해의 제스처와 같이 지속적인 상징이었다.

둘째, 연방공화국 창설하는 **‘통합의 기회(Chancen der Integration)’**를 분명히 만들어 주었고, ‘과거의 그늘’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었다. 주변국들은 주권국 독일보다도 동구에서의 동독처럼 독일이 서방과의 균건한 동맹을 유지함으로써만 자신들의 필요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아데나워는 슈망플랜과 ECSC에 적극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경제발전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Pfetsch, 144-47). 이러한 슈망플랜에 CDU, 산업계, 노동조합들도 전반적으로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SPD 당수 슈마허(Schumacher)와 같이 슈망플랜이 자본주의 경제체제 강화, 카르텔 형성의 고무, 그리고 서독의 친서방정책의 강화로 독일통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다.⁴⁾

실제로 서독은 ECSC 가입으로 산업과 무역재건에 많은 이득을 보았고, 서독의 화폐개혁, OECD와 유럽지불동맹(EPU)의 가입은 서독경제 자립의 기초가 되었다. 동시에 국제경제위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서독의 경제구조와 사회시장경제원리의 형성기인

4) 슈망플랜에 대한 SPD의 입장은 Kevin Featherstone, *Socialist Parties and European Integration: A Comparative Histor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1988), 142-51 참조.

50년대에 ECSC 가입을 통한 서유럽 통합은 전후 독일의 정치·경제적 가치의 중심이 되었다. 아데나워의 선택은 독일통일때 까지 모든 정권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유럽정책의 기둥이었다.⁵⁾ 실제로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아데나워 정책을 부정한 것보다는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⁶⁾

이러한 정책기조를 통해 현재까지도 연방공화국은 협력국들이 품고 있던 앙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동시에 서유럽의 틀 안에서의 다자간 외교협력을 통해 연방공화국은 近東葛藤(Nahostkonflikt)과 같은 ‘역사적으로 미묘한 문제들’을 공동의 정책 뒤로 감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서구 통합은 ‘미국의 보호막’ 뒤에서 경제기적의 전제조건으로서 뿐만 아니라 견고한 서독의 복지 기초를 마련하여 주었다.

셋째, 유럽통합의 참여는 서독에게 자유민주주의 정책과 연방제도를 확립할 기회를 주었다. 바이마르 공화국 때의 혼란했던 국내 정치사정이 독일 민주주의 정착에 큰 장애가 되었고, 결국 히틀러의 독재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이 전후 서독의 정치제도 형성 과정에 큰 교훈으로 작용하였다. 아데나워를 위시한 당시 본(Bonn)의 위정자들은 초국적 유럽공동체의 참여가 서독의 새로운 민주주의 정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실제로 인권, 민주주의, 사회정의,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유럽공동체 가치가 서독의 정치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Hrbek und Wessels, 29-69).

이상으로 볼 때 유럽통합은 서독의 초기 국내 자유민주주의 정착, 경제재건 그리고 대외위상 확립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서독은 초국가적 유럽통합에 항상 적극적인 지

5) 58년 EC 창설국이 된 서독은 60-70년대 EC에서 경제·군사적으로 역할이 커 갔다. 50-60년대 번영과 안정에는 그의 재임기간(1949-63) 동안 영도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서독의 서유럽 편입, 독·프 우호관계에 기초한 유럽통합의 가속화, 신속한 경제재편, 독일분단의 현실적 인정 위에 국제 사회의 지위향상 등, 그의 유럽정책의 큰 흐름은 초국가주의가 독일민주주의 수호의 수단이라는 입장이었다. 55년 9월 이후 할슈타인 독트린을 바탕으로 동유럽권과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정책처럼 서유럽과의 긴밀한 협력에서도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주영, 김용자, 노명환, 김성형, 『서양현대사: 2차대전에서 현대까지』 (삼영사, 1995) 참조.

6) 브란트는 “연속과 혁신(Kontinuität und Erneuerung)”이라는 슬로건 아래, 초기에는 동방정책과 독일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유럽통합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69년 이후 다시 찾아 온 데탕트 분위기에서 헤이그 정상회의 때 EEC 내부 발전보다 확대 지지 발언이 그의 유일한 유럽통합에 대한 관심표명이었다. 그러나 임기말에 유럽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여 광범위한 정부차원의 정치연합을 주장하였고 경제연합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그의 동방정책으로 ‘두 개의 독일’과 베를린 분할이 인정되어 중유럽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을 제거하게 되었다. 이는 동유럽권과 서독 사이의 무역확대와 두 지역 사이의 유대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는 유럽협력 촉진 수단으로 EMU 결성을 계획하고 있었다. EMU가 서유럽국가들을 평등하게 만들고 유럽공동체 국가들의 화폐가치를 안정시킬 것으로 믿었다. W. Brandt, *Bundeskanzler Brandt: Reden und Interview* (Bonn: Hoffmann und Camp, 1969), 47-54.

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서독의 역할은 유럽공동체에서 성실한 모범생(Musterknabe)으로 끝났지 주도적 리더로서의 지위는 인정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독일의 공동체에서의 역할이 국내 정치목적과 외교정책 목적, 경제적 목적과 정치적 목적 사이에 철저히 분리되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상균, 60-79). 다시 말해서 독일은 끊임없이 주변국을 의식하면서 국내정치와 외교정책의 목표를 의도적으로 분리해 왔고, 공동체 내에서도 경제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분리하는 정책을 펴 왔다. 정치적으로 ‘협력의 장’, 경제적으로 ‘경쟁의 장’ 이었던 것이다 (Bulmer and Paterson, 14). 이러한 정책이 전후 경제거인 정치난쟁이로서의 모습에 스스로 만족함으로써 아이덴티티 괴리의 원인이 되었다.

III. 유럽통합과 독일외교정책 논쟁

1. 전후 독일외교정책의 흐름

전후 독일의 외교정책이 서구지향적 유럽통합지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여러 국가들의 그것보다도 다양하게 평가되어 왔다. 예컨대 국제관계에서의 독일의 역할은 군사·정치적이라기 보다 상업·재정적 역할을 강조하는 “무역국가”(Christian Hacke, 94-95), 과거 자신의 조상들이 사로잡혔던 군사·정치적 힘을 떨리하는 “세력망각”(Machtvegessenheit) (Hans-Peter Schwarz), 또는 비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초국적 기구를 통해 추구하는 “민간군(civilian power)”(Hans W. Maull, 269-79) 등 매우 다양하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다양한 표현에 대한 공통된 분석은 전후 독일이 서방 강대국들과는 다른 분야에서 국익을 추구했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 서독의 지도자들은 “국익”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종종 국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사실 서독이 우선으로 여겼던 국익 문제는 서구 공동체 수용, 동독의 안녕, 동유럽의 정치적 안정, 민족통일 등 매우 독특한 것이었다. 그렇다고 동맹국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인 소련의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안정된 시장유지, 해외공급재의 안정, 그리고 유럽통합 등에서도 서독은 다른 방법으로 국익을 추구해야 했다 (Philip H. Gordon, 225-6). 이처럼 상이한 서독과 동맹국들의 관심분야와 상황논리에 따른 전후 독일 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은 <표-1>에 제시한 것처럼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후 독일이 구체적으로 취하게 된 서구 지향적 외교정책의 기조는 “책임정책, 민간군정책, 편향적(parochial) 정책, 그리고 다자적 접근”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Gordon, 226-28).

<표-1> 전후 독일 외교정책의 기본방향

외 부 상 황	전후 독일외교정책의 기본방향	내 부 상 황
서방-동구 동맹체제간 군비 경쟁	I. 안보: 영토보존 및 독자적 발전의 자유보장 (1) 서구: ① 대서양: 미·NATO와 군사동맹 ② 유럽: WEU, 독·프 동맹 (2) 동구: 독일통일, 긴장완화 (3) 남구: 군사적 자제, 동구동맹 저지 및 비동맹 지지	지정·전략적 위치(분단된 국토, 경계위치 및 중유럽 위치)
세계시장 경쟁	II. 복지: 복지국가 보장 및 완성 (1) 서구: ① 대서양: 자유세계경제질서 ② 유럽: 경제통합 (2) 동구: 동·서 경제협력 (3) 남구: 세계시장통합을 목표로 공동발전 노력	고도로 발달된 자유산업사회
체제간 경쟁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진영)	III. 주권: 민주적 조약 및 요구 (1) 서구: 자유민주국가들과 동맹 유럽: 민주주의 안정 (2) 동구: 자유화 정책 (3) 남구: 인권정책, 사회주의적 정향저지	자유민주적 입헌국

자료: Volker Ritterberge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eine Welt Macht?," APZ, (1990), p. 7.

첫째, 겐셔(Hans-Dietrich Genscher)의 지적처럼 독일의 지도자들은 특히 수사적으로 정의·책임감·도덕성을 강조함으로써, 독일의 더럽혀진 역사를 보상받으려고 노력했다. 이는 완전한 통합, 침략전쟁금지의 제도화, 자유정치적 보호정책, 나찌 희생자 보상, 긴장지역의 무기수출 금지 등 인내심을 가지고 우호국들과 특별히 독일의 비행의 피해를 입었던 민감한 국가들의 사정을 헤아리는 것을 의미한다 (Hans-Dietrich Genscher, 1991).

둘째, 전통적인 서독의 외교정책은 군사력보다는 경제력에 중점을 두었다. 물론 1955년 이후 서독은 많은 군사력을 소유하였고 NATO의 중부 전선에서 전쟁역지 역할을 수행해 왔다. 반면 서방 강대국들은 해외기지 유지, 군사개입의 참여, 외교정책 수단으로써 군사력을 사용하였지만, 독일 지도자들은 군사력을 영토방위에만 사용한다는 믿음을 가

지고 있었다. 그리고 기본법(Grundgesetz)이 독일 군사력의 임무를 “방위목적”에만 한정했고, 독일 정치인들은 이를 NATO 밖에서 군사력 사용의 금지로 해석하였다. 사실 독일은 주변국들처럼 생·화학·핵무기 생산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산하지 않았다.

셋째, 서독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비교적 편향적이었다. 물론 유럽내 독일 정치인들은 유럽공동체(EC) 발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고 그리스의 민주화, NATO 내 자국의 이익 보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동방정책(Ostpolitik)을 수행했던 것처럼 매우 활동적이었다. 그러나 유럽 밖에서 독일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실제로 독일은 식민지나 외국에서의 어떠한 군사기지도 소유하지 않았고, 중동평화에 기여하지 못했으며, 중남미·베트남에서 미국의 행위에 대해 공식적인 비판도 억제했고, 해외 갈등지역에서 거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기업들은 냉전으로 인한 세계의 안정된 상황을 활발하게 이용하면서 많은 혜택을 입었다. 킬링거(Thomas Kielinger)는 “세계는 독일에게 위기 상황에서 간단한 개입과 지속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Thomas Kielinger, 1991, 246 and Gordon, 227).

마지막으로, 서독의 외교정책은 국가독립에 대비되는 다자적 행위주체를 우선적으로 강조하였다. 이는 “독일은 주권을 정부간 기구에 이전할 수 있다”고 한 기본법과 관련이 있다. 전후 서독의 국익은 주변국들이 추구하는 국익과 일치하지 않았다. 본 정부는 드골(Charles de Gaulle)이나 대처(Margaret Thatcher)의 국익 추구 방식과는 달리 다국적 맥락 속에서 전 동맹국들의 완전한 지지를 얻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 특별한 국익을 추구하여 왔다.

따라서 1949-89년 사이 독일외교정책의 특징은 겉서의 표현처럼 서방의 요구대로 따르는 “이것도 저것도 정책(Sowohl-Als-Auch)”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독일외교정책에 대한 논쟁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럽통합은 한때 양차대전의 전범이었던 서독이 서구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그 동안 독일은 유럽평화와 유럽통합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커다란 이의 없이 통일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전부터 주변국들은 독일에 대해 제4제국⁷⁾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경제적·정치적

7) 12세기 신학자 요하임 드 프로리스는 “요한의 묵시록”에서 세계사를 삼위일체에 따라 세 개의 질서로 전개했다.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질서로 율법적으로 속박된 유대교 세계이고, 두 번째 세계는 그리스도 속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아들의 세계로 신약성서와 크리스티교 세계, 세

크기에 끊임없이 의구심을 집중시켜 왔다. 과거 서독에 대한 연구경향도 <표-2>에서처럼 서독의 세계권력 순위에 대한 관찰이 주종을 이루었다. 다시 말해서 연방공화국은 이전에는 크지만 '중간세력(mittlere Mächte)'의 불확실한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를 바탕으로 한편에서는 다시 의지만 있으면 '세계 강대국 혹은 숨은 강대국'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세력망각국가'로 평가된다.

<표-2>세계화폐 보유고 및 수출지분

세계 화폐보유고(%)				
	1948	1970	1981	1988
미국	53,3	15,7	6,8	6,2 (47,8 Mrd. US-Dollar)
연방공화국	0,6	14,7	10,9	8,1 (62,5 Mrd. US-Dollar)
일본	0,1	5,2	6,7	12,7 (97,8 Mrd. US-Dollar)

1988년 세계화폐보유에 대한 화폐지분(%)	
US-Dollar:	49,3 (379,0 Mrd. US-Dollar)
DM:	14,0 (107,8 Mrd. US-Dollar)
ECU:	8,1 (62,4 Mrd. US-Dollar)
Yen:	6,1 (46,7 Mrd. US-Dollar)

세계 수출지분(%)				
	1948	1970	1981	1988
미국	24,0	15,4	12,8	11,4 (321,8 Mrd. US-Dollar)
독일	1,3	12,2	9,7	11,4 (322,5 Mrd. US-Dollar)
일본	0,3	6,9	8,3	9,4 (265,0 Mrd. US-Dollar)

번째 세계는 1,000년부터 시작되는 성령의 시대를 제3제국이라고 했다. 철학적으로는 물질적 세계를 제1제국, 정신적 현실세계를 제2제국, 이상적 타당성의 세계를 제3제국이라 한다. 나치독일은 962-1806년의 신성로마제국을 제1제국, 1871-1918년의 독일을 제2제국, 그리고 1933-45년 나치 지배체제인 히틀러의 권력독점세계를 제3제국(Drittes Reich) 이라고 했다. 제3제국에 관한 주요 저작은 다음 참조. Klaus Hildebrand, *Das Dritte Reich* (München/Wien: R. Oldenbourg Verlag, 1979); Klemens von Klemperer, *German Resistance against Hitler: The Search for Allies Abroad, 1938-1945* (Clarendon Press · Oxford, 1992); Geoffrey Stoakes, *Hitler and the Quest for World dominion* (BERG, 1986); Detlev J. K. Peukert, *Volksgenossen und Gemeinschaftsfremde - Anpassung, Ausmerze Aufbegehren unter dem National Socialismus* (Cologne: Bund-Verlag GmbH, 1982).

자료 : Volks Rittberger (1990), p. 13.

그것은 1989-90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동구 공산권의 와해로 2차대전후 계속 되어 오던 동서 대치구도라는 기존의 세계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새로운 국제질서의 정립과 그 질서에 적응해야 할 유럽건설의 재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주변국들과 독일 내부에서도 독일의 새로운 외교정책방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논쟁은 독일이라는 명칭부터 외교정책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제기되었다.

1) 명칭논쟁 : 제국(Reich)에서 블록화한 2중국가로

모리츠(Ernst Moritz)는 1813년 “뉘른의 조국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제기에서 19-20세기 역사는 명확하고 지속적인 해답을 가져다주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독일문제의 뒤에는 세 가지 특수한 문제가 숨어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첫째, 독일통일, 둘째, 영토, 민족 정체성, 셋째, 정치질서와 국제적 위상, 즉 유럽국가체제의 안정성과의 조화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독일은 명칭뿐만 아니라 독일의 지위에 대해서도 재정의 되어왔다.

예컨대 1815/1850년 상이한 정치질서 속에서 수많은 주권국가들과 함께 한 빈공회(Kongreß-Deutschland), 1848/49년 자유로운 헌법국가에 기초한 성바울교회 독일(Paulskirchen-Deutschland), 1867/1871년 전제적 헌법과 팽창적 외교정책을 취한 소독일적 프로이센 독일(Preußen-Deutschland), 1919년 단일국민국가, 민주공화국, 국제적 공존의 종합적 불안정성을 띤 바이마르 독일(Weimar-Deutschland), 1933년 팽창적이고 지도자국가인 민족사회주의 독일(Ns-Deutschland), 1945년 오더 나이세(Oder-Neiße)와 점령지역으로 분리된 점령지구 독일(Kontrollrats-Deutschland), 1949년 이후 분단국가독일(Teilsstaaten-Deutschland), 그리고 1989년에는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등 독일내에서는 과거와 같이 명칭 논쟁이 분분하였다 (Volker Rittberger, 1990: 1-2).

특히 독일연방공화국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상존하고 있다. 이를 놓고 한편에서는 연방공화국은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자리에 입헌적-애국심(constitutional-patriotism)이 가미된 후기민족적-민주주의가 아래로는 연방주들에 그리고 위로는 유럽연합에 영향을 주었다는 입장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독일이란 전통적 주권의 속성을 갖는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보통의 민족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하이픈(-) 없는 애국주의와 책임감은 있지만 결정적으로 국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Timothy Garton Ash, 1994, 66). 물론 양자를 혼합한 형태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었다. 이에 영국의 백과사전은 독일을 ‘중부유럽의 이전 국가, 오늘날 서·중부의 국가, 서방국가이지만 이전 공산진영이었던 동구의 문제에 직면한 준헤비급 세력, 하지만 영원히 지속적으로 존재할 민족’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 커서 세력균형(BOP) 역할을 할 수 없고, 너무 작아서 자신도 지킬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새로운 유럽에서 독일문

제에 대한 논쟁은 이러한 명칭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하며 이러한 시각의 뿌리는 과거 독일의 역사와 관계되어 있다.

2) 낙관론자와 비관론자 논쟁

현재 유럽의 새로운 질서 속에 독일의 좌표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전후 유럽통합은 전쟁재발 방지, 경제건설, 유럽의 정체성 회복과 독일이라는 과거 침략국을 유럽의 틀 안에서 통제할 계획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독일의 외교정책도 유럽통합지향적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구소련 및 동구권의 붕괴라는 탈냉전 상황에서 과거 자본주의체제와 공산주의 체제에서 성공적이었던 서독과 동독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된 후 자연스럽게 EU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로써 독일내부 뿐만 아니라 독일주변국들은 온건론과 강경론의 우려와 기대 속에서 새로운 유럽체제내에서 독일의 새로운 지위를 재평가하게 되었다.

낙관론자들은 유럽의 발전에 대한 통일독일을 기능적·제도적·사회적 영역의 세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첫째, EU 발달사를 연구하는데 전통적으로 신뢰해 온 통합이론의 기능적인 측면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⁸⁾ 그 중심에는 독일이 EU와 NATO와 같은 국제기구에 머물게 됨으로써, 독일의 힘이 억제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소한 여기에는 두 가지 가정이 주어진다. 첫째는 이러한 기관에 가입함으로써 독일과 주변국간의 상호의존관계 성립 및 우호관계 개선으로 긴장관계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가정이다. 이는 1950년대 초에 미국이 독·프협력을 요구한 배경과 일맥상통한 것으로(Robert Gilpin, 1975: 107), 결과적으로 독일은 국제적인 결합과 협력을 통하여 억제되고 또는 통제되어 온 것이다. 한 리더는 이러한 기능주의적인 협력관계를 전후 미국이 독일과 소련에 대해서 “이중의 억제(doppelte Eindämmung)”(Wolfram Hanrieder: 5-7) 정책을 취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주장은 아마도 소련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봉쇄하고 독일의 잠재적인 제국주의적 속성을 막을 수 있다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가정은 국가는 일반적으로 상대적인 이익보다 절대적인 이익에 관심이 있으며 독일의 무역상대국들과의 협정은 특히 긍정적인 결과, 즉 쌍방간에 상호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Joseph Grieco, 10). 두 번째 과정과 관련해 독일이 EC와 같은 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생겨나는 근본적인 효과는 그것이 독일의 경제력을 자극하고 우위를 점하게 함으로써, 공동의 유럽을 발전시킬 것이며 외국투자를 늘리고 국가간 물물교환의 외국무역을 배려하

8) 이 분야와 관련된 고전적인 문헌으로는 특히 Ernst Haas, *The Uniting of Europ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Forces 1950-1957*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8); Leon Lindberg and Stuart A. Scheingold, *Europe's Would Be Polity: Patterns of Change in the European Community*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70) 참조.

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콜은 이러한 가정을 열렬히 옹호하였다 (Helmut Kohl, 1990: 11). 이러한 해석의 옳고 그름은 오직 경험적인 면에서만 검증될 것이다. 어쨌든 독일은 공동으로 성장하는 유럽의 맥락 속에서만이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시각은 제도적인 면이다. 이는 독일통일의 실현을 촉박받은 것으로 제시하고 독일의 전후 국내정치체제의 발전에 중점을 둔다. 조프(Josef Joffe)는 연방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를 미래에도 보장하고 만일 새로운 독일이 성공하려면 구독일의 정치구조를 스스로 수용하고, 흡수할 것으로 보았다. 독일의 외교정책이 경제적 제국주의 혹은 군사적 침략 면에서 모든 노력을 포기하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그는 억제된 독일국가의 상을 요구했다. 이는 내적 민주적 개혁에 있어서 독일의 알맞은 외교정책을 제시할 것처럼 보인다 (Josef Joffe, 1990).

세 번째 시각은 사회적 측면으로, 독일내 엘리트들의 상태와 태도에 대해서 심사숙고한다. 이 시각의 중심적인 전제조건은 “경험적 지식(Wissen durch Erfahrung)”을 소개하는데 기초를 둔다. 이 주장의 중심은 독일의 경제·지적·정치 분야의 엘리트들이 자신들 과거에 대해 책임감을 인식하고 있으며 모든 군사적, 반자유적 그리고 외국인 혐오 경험에 경계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독일 엘리트들은 통일에 대해서 양립하는 반대 감정을 품고 있으며, 과거의 잘못을 두 번 다시 저질러서는 안된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반역사의 시각에 따르면 새로운 독일의 경제·정치 엘리트들은 전통적인 제국주의적이고 침략적인 태도와 1945년 이전의 귀족적인 대토지 귀족(Landjunker)들의 사고방식에 대해 부르주아적 가치의 전후 승리를 표현한다. 시민적 가치는 유럽경제의 맥락속에서 세계 정치적 문화를 강조한다.

사실, 독일내 다수의 독일정치학자들의 시각은 구연방공화국의 지도자들이 냉전시대 독일의 지위를 ‘분리된 유럽에서 분리된 독일’로 인식하고, 베를린의 지위를 ‘분리된 중앙에서 분리된 중앙’으로 인식하였다. 동·서 긴장상태에서 이루어진 본(Bonn) 공화국의 외교정책은 모스크바와 동베를린의 공격을 받기 쉬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독일은 새로운 국제정세의 도래로 더 이상 동구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독일이 서방, 특히 EU로 통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Ash, 66-70).

그러나 이에 대해 비판론자들은 영토 크기가 커진 독일의 주권이 더욱 확고해졌고, 구연방공화국보다 지리적으로 더욱 중앙에 위치하게 되어 독일이 비스마르크 시대의 제2제국처럼 유럽의 중앙국가로 회기했다고 주장한다.⁹⁾ 또한 유럽의 역사상 국가들이 보다

9) 오늘날 독일의 지리적 위치는 과거 비스마르크 제국보다 더욱 서구쪽에 위치하고 있다. 과거에 프러시아는 중·동 유럽, 즉 현재 리투아니아와 러시아내 칼리닌그라트(Königsberg) 지역에

큰 통합체로 통합된 성공된 본보기가 드물고, 오히려 냉전후에는 분열의 본보기가 많았기 때문에, 위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Ash, 1994: 65). 따라서 이들은 독일이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주변국들에게 비합리적인 ‘영똥한 소리’ 내는 역할을 즐겨한다고 비판하며 이를 두려워한다. 이러한 비판적인 견해는 독일의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영역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첫째, 군사적으로 독일의 군대는 유럽에서 가장 크고 잘 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독일이 “2+4” 조약을 통해 ABC 무기 포기를 약속했고, 군사적으로 최강국도 아니며, 여전히 독일 정부가 자국영토 방위 외에는 국익을 목적으로 군사력이나 군사적 위협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 통제와 같은 군사력의 질적 향상은 다자적 맥락에서 취할 것이라는 입장도 있지만 회의론자들은 독일이 이 약속을 반복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히틀러 이후 국가 군사력에 대한 여론의 혐오감을 영구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역사적으로 보아 다른 강대국과는 다르게 행동할 것으로 주장한다.

둘째, 독일은 경제대국으로, 이를 배경으로 독일 정부는 외교정책 달성을 위해 기술적으로 경제를 도구나 유인책으로 사용할 것이며, 연방은행의 한결같은 국내화폐 및 재정 정책 추구가 주변국, 무역협상국, 그리고 외교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독일은 구동독지역 재건을 위해 막대한 비용과 구서독의 ‘사회시장정책’의 위기로 경제력이 약화되었다는 시각이 있으며, 이상의 두 가지 위기 극복 정도 및 시기에 대한 견해도 다르다.

셋째, 사회, 문화, 그리고 삶의 방식에 있어 전반적으로 매력적인 곳이라는 주장이다. 1945년 독일은 위협 및 공포와 동의어였고, 85년에는 하나의 모델 혹은 최면력이 있는 곳 (Magnet), 1989년에는 동유럽인들이 마음속에 간직한 자유, 민주, 시민, 그리고 부르조아적 정상화의 중심이라는 동의어가 성립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에 대해 비판론자들은 이를 강조해서도 안되며 서독인들의 태도는 생색을 내거나 신식민주의적이라는 것이다 (Ash: 66-70).

IV. 결 론

전후 유럽내 독일의 위상은 경제적으로는 강한 국가중 하나인 반면, 정치적으로는 지명도가 매우 낮았다. 다시 말해서 유럽은 독일에게 있어서 ‘정치적으로는 협력의 장, 경제적으로는 경쟁의 장’이었다. 이러한 ‘경제거인’이지만 ‘정치난쟁이’라는 아이덴티티 괴리

불품없이 뿔어 있었다. 현재는 오더나이세(Oder Neisse)강 서편에 간절하게 위치하고, 보헤미아의 마름모꼴의 췌기 모양에 위치해 여전히 독일은 민감한 동구 이슈에 직면하고 있지만 국가의 중심은 서방을 향하고 있다.

는 과거의 역사적 짐과 독일분단의 결과인 압박감으로 설명되었다.

사실 구연방공화국의 지도자들은 냉전시대 독일의 지위를 '분리된 유럽에서 분리된 독일'로 인식하고, 베를린의 지위를 '분리된 중앙에서 분리된 중앙'으로 인식하였다. 동·서 긴장상태에서 이루어진 본(Bonn) 공화국의 외교정책은 모스크바와 동베를린의 공격을 받기 쉬웠다. 따라서 그 동안 독일은 동구블록의 몰락과 같은 국제정세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편안한 선택권'을 갖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독일은 EU 통합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 있어서 주변국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서 신중히 진행시켜야 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전제조건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날 독일은 오랫동안 외교정책의 전략적 목표였던 통일이 달성되었다. 그러나 독일의 통일은 동독의 합류로 구동독주들이 한편에서는 독일연방과,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연합에 통합된 이중통합(doppelte Integration)이었다. 그리고 유럽통합은 서구중심의 유럽통합의 심화를 진행하면서 동심원권으로 동구로 확대한다는 기존 유럽통합의 두 가지 방향과, 빈국과 부국간의 진행이라는 두 가지 속도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하에서 독일외교정책에 대해 과거와 관련된 다양한 견해들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견해들은 한편에서는 향후 서구동맹국들의 연대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과 경제력·정치·군사력에 걸맞는 외교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타났다. 이러한 기대감 외에도 독일이 권력국가로서 한숨을 깊이 잔후 다시 깨어나서 돈 모으는데 열중하다가, 혹시 이를 바탕으로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독일 내부와 주변국들의 비판론자들로부터 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서방적 외교정책을 취해온 독일이 어떠한 외교적 입장을 취하더라도 과거를 반성하는 국내적 논자와, 과거로의 회귀를 우려하는 주변국들로부터 부정적인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것은 독일이 유럽공동체내에서 유럽통합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진행 속도를 서둘러도, 그리고 주변국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도 유럽통합 발전에 관심이 없지나 않을까 하는 의혹을 사게 될 것이다. 결국 독일이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력을 행사하고 과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첫째, 독일 민족의 자의식 차원에서 그 해결점을 찾고, 둘째, 유럽통합의 속도와 방향도 주변국들이 독일에 양보를 원하는 만큼 해당국들도 이를 양보하도록 설득하는 외교정책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김성형. 1997. 「미스트리히트 조약과 독일의 선택」. 『한국정치학회보』. 31집 1호. 1997년. 봄.
- 이상균. 「독일의 유럽정책 결정구조: 연방정부와 연방은행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연구발표회 논문.
- 이주영 · 김용자 · 노명환 · 김성형. 1995. 『서양현대사: 2차대전에서 현대까지』. 삼영사.
- Ash, Timothy Garton. 1994. "Germany's Choice." *Foreign Affairs*. Vol. 73. no 4.
- Bulmer, Simon and Paterson, William, 1989.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European Community* (London : Allen & Unwin).
- Genscher, Hans-Dietrich. 1991. *Wie wollen ein europäisches Deutschland*. Berlin: Goldman.
- Gilpin, Rober. 1975. *U.S. Power and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New York: Basic Books.
- Gisch, Heribert. 1991. "European Parliamentary Union: Conference of German and French Parliamentarians." June 19-20. 1950. in : Walter Lipgens and Wilfried Loth (ed.). *Documents on the History of European: Transnational Organizations of Political Parties and Pressure Group in the Struggle for European Union, 1945-50*. vol. 4. Berlin · New York.
- Gordon, Philip H. 1994. "Berlin's Difficulties: The Normalization of German Foreign Policy." *Orbis*, Spring 1994.
- Grieco, Joseph. 1990. *Cooperation Among Nation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Hacke, Christian. 1992. "Germany and the New Europe." in David P. Calleo and Philip H. Gordon, eds. *From the Atlantic to the Urals: National Perspectives on the New Europe*. Arlington, Va.: Seven Locks' Press.
- Hanrieder, Wolfram. 1989. *Germany, America, Europe: Forty Years of German Polic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Hasner, Pierre. 1990. "Europe beyond and unity: disintegration or reconstruction?," *International Affairs*. March 1990.
- Heater, Derek. 1992. *The Idea of European Unity*. Leicester and London: Leicester University Press.
- Hick, Alan. 1950. "European Union Federalists Executive Bureau; The Federalists and the Schuman Plan, June 3 1950. in: Walter Lipgens and Wilfried Loth, vol. 4.
- Hrbek, R. und Wessels, W. 1984. "Nationale Interess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Intergration Prozess." in: *Hrbek, R. und Wessels, W., EG-Mitgliedschaft; ein vitales Interess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Bonn: Europa Union Verlag.
- Jellinek, Georg. 1960. *Allgemeine Staatslehre*. Neuwied/Darmstadt, 7. Neudruck.
- Joffe, Josef. 1990. "Reunification II: The Time, No Hobnail Boots." *New York Times*, Sept. 1990.
- Katzenstein, Peter J. 1987. *Policy and Politics in West Germany: The Growth of a Semi-Sovereign State*.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Kielinger, Thomas. 1991. "The Gulf War and the Consequences from a German Point of View." *Aussenpolitik*, vol. 42, no. 3.
- Kohl, Helmut. 1990. "The Voice of Harmony that Stills National Rivalry." *Financial Times Survey*. *Financial Times*. October. 1990.
- Laqueur, Walter. 1992. *Europe in Our Time: A History 1945-1992*. New York: Viking Penguin.
- Lipgens, Walter and Loth, Wilfried (ed.) 1991. *Documents on the History of European: Transnational Organizations of Political Parties and Pressure Group in the Struggle for European Union, 1945-50*. vol. 3, 4. Berlin · New York.
- Loth, Wilfried. "French Political Parties and Pressures in the Discussion of European Union." in : Walter Lipgens and Wilfried Loth, vol. 3.
- _____. "The Movement Socialiste pour les États-Unis d'Europe (MSEUE)." in Walter Lipgens and Wilfried Loth, vol 4.
- _____. 1989. *Ost-West-Konflikt und deutsche Frage*. München: dtv.
- _____. 1986. *Die Teilung der Welt 1941-1945*. München · Wien: Carl Hanser Verlag.
- Maul, Hanns W. 1992. "Zivilmacht Bundesrepublik Deutschland." *Europa Archiv*, May 10. 1992.
- Pfetsch, Frank R. *Die Außenpolitik der Bundesrepublik 1949-1992* (München: Wilhelm Fink Verlag).
- Rittberger, Volker. 1990.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eine Weltmacht? : Außenpolitik nach vierzig Jahre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 Schlußresolution der Konferenz von Messina vom Juni 3. 1955. *Archiv der Gegenwart*, Juni 4. 1955.
- Schwarz, Hans-Peter. 1985. *Die gezähmten Deutschen: Von der Machtvergessenheit zur Machtvergessenheit*. Stuttgart: Deutsche Verlags-Anstalt.
- _____. 1995. "Das Deutsche Dilemma." in: Karl Kaiser und Hanns W. Maull (Hrsg.). *Deutschlands neue Außenpolitik*. München: R. Oldenbourg verlag, 2. Auflage.
- Williams, Allan M. 1995. *The European Community*. Oxford, Basil Blackwell.

The European Integration and the New German Dilemma

Kim Sung-Hyoung

*Research Institute For New Korea(RINK) Research Director
and The Kuk-Min Daily, Research Director*

The fall of the former Soviet Union and the East-European system as well as the Germany reunification have shaken the existing international political structure. In connection with this on-going change, Germany, which by then was regarded as a political dwarf, has risen to a political and diplomatic great power. At the same time, Germany tries to move Europe toward deeper integration.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ssue of what long term implications Europe's integration might have for German national interests, after the German reunification and the conclusion of the Maastricht treaty.

Germany has to deal with the question of how it will satisfy the demands of its citizens domestically and how it will harmonize those demands with the demands of the other European nations, which have some reservations about German intentions. These suspicions are related to the German geopolitical position and its enhanced political power.

Germany added to these suspicions not only by rapidly pursuing Europe's integration but also by pursuing its own national interest. Concerning the Europe's integration method, it will consequently be the German goal to build up a federal system. But at the same time Germany also needs to consider possible oppositions from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forces. In order to satisfy all these domestic and foreign demands, this paper argues, Germany will possibly pursue an "interdependent foreign policy".